

기रो에 선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화근—왜 역사적 갈등(마찰)은 끝나지 않는가?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은 양측의 '정체성 충돌'이다. 정체성이란 언어, 문화, 종교, 역사, 민족성(ethnicity) 등에 의한 자기인식(나는 누구인가? /자화상)이며, 타자에게 승인 받음으로써 안정된다(승인욕구를 동반함). 따라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가 말하듯 '정체성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란 이해(利害)와 이성의 정치가 아니라 '존엄의 정치'("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이며, 이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분노의 정치'이다. 또한 앤서니 데이비드 스티븐 스미스(Anthony David Stephen Smith)가 지적하듯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확립은 민족주의(Nationalism) 운동의 중심적 목표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인과 한국인은 진정으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보다도 자신의 역사적인 자화상을 지키기 위해 즉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것은 아닐까?

어찌 되었건 '정체성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 한일관계의 최대 화근(실패)은 러일전쟁 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이다. '보호'정치에는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병합'정치는 정체성을 박탈하는 것밖에 없었다. 여기서 양측의 근대적인 자화상을 확인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일본인의 자화상 / 보신 전쟁 (戊辰戦争), 메이지 유신 그리고 세이난 전쟁 등을 거쳐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에 성공하고, 청일,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아시아의 맹주가 되었다/ 그 배경에 지정학적인 불안
 - *청불 전쟁(1884 년)이후 중국이 조선을 열강에게 뺏길 것을 우려→일본의 보호국으로 / 청일전쟁, 러일전쟁
 - *아베총리의 전후 70 년 담화는 러일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한일병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한국인의 자화상 / 일본의 계획적인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가혹한 지배에 용감하게 저항하여 독립을 이뤄냈다—의병투쟁, 3.1 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만주무장투쟁(봉오동 전투) 등
 - *피해자 민족주의 / 일제강점기가 가혹할수록 한국인의 저항은 영웅적인 것이 된다.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문제는 식민지통치보다도 중일·태평양전쟁 당시의 전시동원이었다.
- 한일병합조약(1910.8.22) / 한국 황제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 *배경에 청일전쟁 후의 외교실패 / 삼국간섭, 명성황후 시해 사건(1895), 아관파천(1896)→러시아의 위협 확대
 - 러청밀약 (동청철도), 여순과 대련의 조차(租借)권 획득, 남부지선 시설권(1898), 의화단사건→러일전쟁(1904~05)
 - *한일 병합은 "이상한 식민지화" (미타니) / 가산제국가론(Patrimonial State)의 이웃나라의 병합, 야마가타(山縣)들의 무단주의(무력을 행사하여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 메이지 일본의 정책으로서는 영국모델, 즉 대륙에 대한 '불개입'정책 (해군건설 + 한정적인 한국 지원) 이 옳았다 /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 *러일전쟁에서 획득한 러시아권역(관동주, 남만주철도)이 국책을 잘못하게 했다→만주사변
- 역사적인 사실의 규명이 반드시 '존엄의 존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일역사공동연구(제 1 차)는 인식일치가 아니라 학문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시도였다→실패 / 논쟁의 마당

냉전 하에서의 국교정상화—1965년 체제

해방 후 20 년 동안 한일 간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았다(심한 감정의 충돌)/ 전쟁이 끝난 후 6 년 간의 공백과 14 년 간에 걸친 곤란한 교섭(1951.10~65.6)을 거쳐 1965 년 12 월에 한일은 35 년 간의 일본의 한국통치를 법률적으로 청산하고

국가관계를 정상화했다. 새로운 조약체제는 주요문서만 해도 기본관계조약,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화재 인도협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의 어디에도, 일본 측의 사죄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하에서의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일의 안보에는 공헌했으나,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죄가 없는 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장차 화근을 남기게 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 1951.9.8

- 제 2 조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모든 권리, 자격 및 청구권을 포기"
- 제 4 조 / 이들 지역의 '청구권'은 (해당국 간에) 특별협정으로 다룬다

< 제 1 차 ~ 제 7 차 한일회담 >

- 제 1 차 본회담 1952.2.15-4.25 / 한국통치에 관한 거대한 인식의 차이→구조약의 유효성 논란

*한) 병합조약은 '무효' / 원천적 무효였다는 '강한 신념/국민감정'(유진오), 대일 청구권 8 개 항목 제시(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 간 지금(地金),지은(地銀)의 반환청구,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등)

*일) 병합조약은 '합법' / "국가의 병합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미군정부의 관리재산처분 후에도 , 일본측의 사유재산청구권은 잔존한다(역청산권)

*미)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은 소멸되었으나, 그 사실은 재일한국재산의 처리와 관련된다"(구상서 52.4)

- 제 3 차 회담 53.10-청구권위원회에서의 구보타(久保田: 수석대표)발언 10.15 /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총독부 정치는 좋은 면도 있었다"(예를 들어 식림,철도,항만,논) "카이로 선언은 전쟁 중 흥분상태로 쓰여진 것이었다"→장기 (5 년반) 중단과 일본어선나포

*구시대적 감각 / 일본국내를 개발하는 느낌→죄책감 없음 (오히려 선의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함) →식민지 근대화 논란

- 제 5 차 회담(60.10) / 4.19 혁명 후 장면내각에게 경제협력방식(청구권의 상호포기)를 시사
- 제 6 차 회담(61.10) / 쿠데타 후 이케다· 박정희 회담 61.11→경제협력의 규모에 관심
 - 오히라 · 김종필 회담(62.10~11) / 무상공여 3 억 달러, 정부차관 2 억 달러, 민간차관 1 억 달러 이상→민정이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63.10-11) 을 위해 약 1 년간 교섭중단 / 재개(64 년 3 월)
 - 한국 내에서 반대투쟁의 고양 / 비상계엄령 64.6→6.3 세대
- 제 7 차 회담 64.12- / 시이나 방한, 기본조약에 가조인 65.2→조약·여러 협정 조인 65.6

< 기본관계 >

- 구조약은 '무효'→언제부터 무효인가? / '이제는 무효(원천적 무효)' = 이중해석에 합의
 - "유감과 반성" / 시이나 외무상의 한국도착성명 65.2→"양국 간의 오랜 역사 중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 이동원 외무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도 반복함

< 청구권 >

- 청구권 협정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65.6.22
 - 제 1 조 / 경제협력→3 억 달러의 무상공여, 2 억 달러의 저이자 대출, 10 년 분할로 제공
 - 제 2 조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 제 2 조 3 항 / "같은 날(1945.8.15) 이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 / "한일이 국가로서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 : 柳井俊二) 답변 91.8

< 경제협력 >

- 시이나 /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은 완전히 별개의 것"→"한국의 독립에 대한 축하금이다"

*제 1 조 부기 / “공여 및 대출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협력은 인프라·공업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발전용 댐, 고속도로, 제철소 등

· ‘한강의 기적’ / 3 요소 / ①수출지향적 발전전략 + ②청구권 자금 + ③베트남 특수

제 2-3 차 5 개년경제계획(67-76)→중화학공업화 선언 73.1

* 「대일 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74.12→무상공여의 3.6% (약 95 억원) 을 지불 / 일본측은 묵인 (청구권의 상호포기) →JP 의 회상

*한일회담 공문서 공개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05.8 / 「무상 3 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6 5 년 체제란 무엇인가 >

·①구조약의 ‘이제는 무효’ + ②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경제협력에 의한 관계정상화

·①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 위한 자금조달과 ②사죄 없는 국교 정상화

*신냉전 시대에도, 경제협력방식은 “40 억달러 차관”으로 재현되었다 / 나카소네총리방한 83.1

·한국에서의 격심한 반대운동 (학생,야당,신문) / 계엄령 64.6, 위수령(衛戍令)65.8, 단독국회 날치기 통과 65.8

< 냉전 하에서의 국교정상화 >

· 타협의 배경 / ①안전보장상의 필요성,② 한국경제발전의 필요성, ③미국의 강력한 요청 / 케네디 정부의 베트남 개입, ④군사정권의 리얼리즘 (반일 < 반공과 건설)

· 그러나 “사죄없는 정상화”는 병합조약의 합법·불법논쟁을 남기고, 그것이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불신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65 년 체제는 냉전종결과 한국 민주화의 충격에 견디지 못했다.

단명으로 끝난 1998체제—오부치·김대중 공동선언

한국의 민주화와 냉전 종결이라는 충격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이어 1998 년 10 월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일본은 65 년 체제의 정치적인 수정을 단행했다. 이것이 98 년 체제라 불리는 것이며, 1998 년에서 2004 년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 붐 등으로 이어져, 역사 화해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2002 년 9 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북일 평양선언에 명확하게 반영되었다. 사실 일본과 북한은 경제협력방식(청구권의 상호포기 + 경제협력)에 의한 조기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것이다. →(조약·협정+사죄표명 + 인도적 구제>

·냉전 종결 (베를린 장벽 붕괴)→유럽 / 독일통일, 전쟁화해, 유럽통합

일본도 “국제협조, 역사 화해”외교로 대응→65 년 체제의 정치적인 수정 (not 법률적)

* 고노 담화(93.8) / 위안부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를 인정→“반성과 사죄” 표명

* 아시아여성기금(95 년 7 월~2007 년 3 월)/ 민간이 ‘배상금’을 모집하고 정부가 의료·복지 등을 지원

* 무라야마 담화(95.8) /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 / 단, 병합조약은 유효→ “부당합법”론(“이제는 무효”는 유지)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공동선언 / 65 년 체제의 정치적 수정 (not 법률적)

*오부치 총리의 “반성과 사죄”표명을 김대중 대통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평가한다”

*1998~2004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붐→역사적 화해에 대한 기대

·고이즈미 방한 01.10 / 새로운 전몰자 추도·평화 기념 시설 건립 검토, 한일역사 공동연구 추진

·노무현 정권 03.2- / 최초의 진보 단독정권→고이즈미 총리 방북 02.9 과 북일 교섭을 환영

** (역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04.7→반전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2005.2)-

·진보정권의 역사관 (노무현의 삼일절 연설 05.3) / “역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은 < 진상규명

→사죄·반성→배상→화해 > 이다→65 년 조약과 98 년 선언 부정 / 화해 좌절

*진보세력은 30 주년 (1995 년) 경부터 한일조약의 폐기·재교섭을 요구 (박원순, 강창일)

- 간 나오토총리의 '강제병합 100 년 담화' 10.8 / 3·1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 / 센고쿠(仙谷) 주도

한국 사법의 정치개입—법률주의와 도덕주의의 도전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부활? / 유교적인 정치감시 전통? (도덕주의 / 도덕의 강제)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민주화에 의한 부활? → 사법 적극주의로 변신 /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서 정부를 구속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은 외교적 합의 (「이제는 무효」) 의 파기명령 → 65년, 98년 체제 거절

*일본 근세의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와는 대조적 / 「싸움을 하면 둘 다 벌함」 (비이념적인 분쟁 처리)

▼ 이명박 대통령 (2008년 2월 ~ 13년 2월) / 사업가 출신이며 반일은 아니었다 ①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② 후반기의 스캔들 → 일본 비판

2011.8 헌법재판소, 위안부 문제에서 외교통상부의 「부작위」 / 외교보호의무를 인정

12 이명박·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위안부 문제로 격론 (교토)

2012.5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외교보호권도 소멸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 일본의 판결은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

7 파기환송심 / 서울·부산고법,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에 배상명령 → 상고

8 이명박 대통령 독도 상륙 / 일왕 방한에 대한 발언도

▼ 박근혜 대통령 (2013년 2월 ~ 17년 3월) / 외교에 의한 해결 모색 → 재판에 제동을 걸면서, 대일역사비판을 전개

2015.12 위안부문제에서 합의 (「화해치유」재단 설립) / 일부 위안부 소송 16.1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 / 사법권독립을 옹호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 재판의 지연은 보수정권에 의한 '적폐'의 일부 / 양승태·전 대법원장을 구속 19.1

2018.8 대법원, 신일철주금 (일본제철) 환송심을 시작

10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명령(10.30) / 미쓰비시중공 11.29 후지코시(1.30)

11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 / 19.7.3 절차 완료

*위안부 할머니 47명 중 34명에게 1억원 지급, 잔여금 약 5억엔

2019.1 신일철주금의 자산 차압허가 1.3 / 포스코와의 합병회사 PNR의 주식

일본 정부,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1.9 →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5.20)

5 원고측, 일본제철 19.4 과 후지코시의 차압자산 (주식) 의 매각신청

6 조세영차관 방일 6.16-17? / 외교부안 「한일양국의 기업이 자발적인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의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화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9 발표) → 일본 측, 한국안을 거부하고,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제3국 선정을 요구

2021.1 서울중앙지법, 일본정부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명령

4 서울중앙지법, 원고의 소를 기각 / 주권 면제 인정

진보 민족주의의 복권—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2017) / 진보세력 = 반독재·민주화세력, 통일세력이라는 자부심, 김구노선 (남북협상) 의 복권 → 남남갈등 심화 / 군사세력 = 분단세력, 친일세력

*집합적 기억 = 피해자 민족주의 / 독립운동 (임시정부), 신탁 통치 반대 운동, 4.19 혁명 (반 이승만), 민주화 투쟁(반 박정희), 5.18 민주화운동(반 전두환), 촛불집회/ 한일조약반대투쟁?

· 진보 민족주의의 역사관 / 문재인인의 삼일절 100주년 연설 → 김구노선의 부활

(1) 「친일잔재 청산」 / 「친일」을 반성, 독립운동가를 '예우', 그것이 '정의'

(2) 3·1 독립운동의 계승 /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 「촛불혁명」

- (3) 「신한반도체제」 /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경제협력, 북미·북일 정상화
- 진보정권의 '이행기 정의' / 박근혜 정권의 사법개입도 「적폐청산」의 대상
 - (1) 삼권분립 존중 / 사법의 정치감시 (도덕주의) 를 용인
 - (2) 피해자 중심주의 / 원리주의적인 운동단체의 의사존중→위안부재단을 해산
-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 갈등 / 문재인 정부의 북미중재외교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아베는 트럼프와의 친밀한 관계로 대항

아베 정권의 반격 / 65년 체제 사수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국가관·역사관을 가진 정치지도자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역사논쟁(야스쿠니 신사참배, 방미외교, 70년 담화)을 반복했으나, 2015년말 (한일조약 50주년)에 어쩔 수 없이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원고 승소)과 문재인 정부에 의한 위안부 재단의 해산 등이 다시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없던 것이 되고 65년 체제가 붕괴된다는 위기감을 배경으로 오사카 서밋(6.28-29) 후에 참의원선거 공시(7.4) 전에 반격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고노 외무상의 사전경고 /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국 및 양국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1965년 이후 구축해 온 한일의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 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서면 인터뷰, 동아일보 19.6.26)
- 일본의 경제산업성 '한국향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 7.1 발표 /
 - (1) 3대 핵심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 / 통보→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적용
 - (2)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 재검토→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순을 밟음→8월 2일 각의(국무회의)결정, 8월 7일에는 정령공포 8.28 시행
-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 /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 아베 총리는 '정치'를 말한다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7.3 당수토론) →사실상의 경제제재 / 한국 측은 GSOMIA 파기로 대항
- 아베 기자회견(7월 22일) /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다. 신뢰 문제이다."
 - *수출관리정책과 연관시킴으로써 한국이 조기에 굴복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 공과(功過) / ①선을 긋고 65년 체제를 지킨다, ②분단정책으로 공급망과 교류를 차단

새로운 시대의 한일관계—그 윤곽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갈등이 많은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일강제병합의 역사와 사죄가 빠진 국교정상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인은 그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조지 케넌(George Frost Kennan)의 경고를 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정치와 외교를 법률주의와 도덕주의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명한 일도 아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지정학적인 불안"을 법률과 도덕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일 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성장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한 것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상주의)의 균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이다.

- 사실상 한국 사법의 정치개입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듯 하다. 1월 중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원고승소판결(1월)에 대하여 "약간 곤혹스럽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의 공식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도 '현금화'를 회피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4월에 다른 위안부 할머니의 소송을 기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향후 정치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한일관계의 단기적 개선은 용이하지 않다. 앞으로 1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 도쿄 올림픽(7 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9 월)와 중의원 해산(10 월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내년 3 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은 외교적 난제 해결에 대응할 여유가 있을까? 더구나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외교교섭은 한일의 차기 정권에 맡겨지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모두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2.8%와 48.1%에 달하며,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2%와 37.0%에 달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본 측은 64.7% 이고 한국 측이 78.0%였다. 감정적인 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온건하며 “건전한 상식”을 잃지 않고 있다.

·향후 한일관계의 윤곽을 생각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요소가 중요해질 것이다——

- ① 대등한 경쟁관계 / 선진적인 IT 기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융성 (음악, 영화), 1 인당 GDP 와 국방비 상승 등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가혹한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고, 한국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다행히도 많은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은 그것을 무리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과 한일의 세대교체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좋은 라이벌이 절차탁마하여 좋은 친구가 되는” 관계가 한일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 ② 국제시스템의 변화 /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변동을 예감하게 한다. 새로운 냉전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심각한 체제경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동맹국과 우호국의 결속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자유 공개 인도-태평양 전략 (FOIP)뿐 아니라 쿼드(QUAD),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연계강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노력과 병행하여 북미 간의 비핵화 교섭이 실무차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내년 3 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이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국제 시스템의 형성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③ 전략공유 가능성 /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에 끼여 기본적 가치(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를 공유하는 미들 파워이다. 대국의식이 없는 한일은 미들 파워의 전략을 공유할 수가 있다. 작년 9 월 스가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일에 전략공유가 정착되면 그것이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의식공유를 촉진시킬 것이다.
- ④ 재출발의 토대 / 장기에 걸친 한일관계 악화가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에 한일양방의 일반 국민들이 환영하고,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 균형 잡힌 98 년체제,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재출발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